

특 강 자 료

- 참여정부 4주년 국정과제위원회 합동 심포지엄 -



2007. 1. 31(수)

대 통 령

홍은등 포럼에서 개최되거든 신조지였에서 매료된 자들이.
당시 한 노후한 대동정의 방언은 바로 보란리것은 것으로
갈라짐. 이 자료는 대동정 방언은 다른 문헌에서 의미나
노후한 대동정에 각기 작성했다는 의견이 있어 그 가치가 有.

42010

21세기 한국의 국가발전전략

0.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가?

-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정보화, 지식기반 경제의 발달로 생산, 유통, 소비,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고 그에 따라 시장의 환경과 경쟁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제3의 물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제3의 물결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무대가 넓어졌다.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중국, 인도 등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달라졌다.

-한국의 경쟁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넘어서 3만 불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2만불 시대의 의미-95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선 지 12년만의 일이고, 외환위기를 겪고 다시 1만 달러에 진입한 지 7년만입니다. 좀 깎아서 말하면 원화 가치 덕분입니다. 다만, 저는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수출이 늘어나서 외환보유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외국인투자가 들어오다 보니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2만 달러 달성은 단지 환율 덕분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데, 미국은 10년, 독일은 13년 걸렸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그 과정

에서 경제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형 국가를 제외하고는 2차대전 이후 해방된 나라 중에서 2만 달러에 들어선 나라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경쟁의 상대가 다르다. 선진국, 선두그룹-마라톤에 비유 이상 더 따라가는 경제로는 안 된다. 앞서가는 경제라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고 참고할 수가 없다.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속도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한국의 특수한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발목을 잡고 있는 고리를 풀고, 약한 고리를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양극화, 낮은 수준의 복지과 사회적 자본의 문제이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경제발전, 일자리, 복지재정을 통한 재분배가 중요하다.

복지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복지재정이 선진국의 수준에 현저히 미달

신뢰와 통합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이론, 신뢰의 수준, 통합의 수준에 관한 지표등을 소개하자. **법질서 준수, 사회응집력 등의 사회적 자본의 지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IMD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우리의 사회응집력은 세계 48위

-미래의 한국사회가 부닥치게 될 새로운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저출산과 인적자본의 감소,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응

0.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새로운 세계에 대응하는 전략

혁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더 넓은 시장,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한국의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함께 가는 복지사회, 균형발전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전략

저출산 고령화 대책

0. 혁신

-혁신이 필요한 이유

-기술 혁신

-교육 혁신-인재육성

-시스템 혁신

-산업구조의 혁신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지식기반 서비스로, 고급소비 서비스로,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정부혁신

-혁신 방법의 혁신

0.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자유로운 시장

자유로운 경쟁이 창의를 자극하고 생산성을 높입니다.

관치경제의 해소,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의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시장 친화적 방법-각종의 보조와 지원

-공정한 시장

모두에게 자유로운 시장이 공정한 시장입니다. 강자의 자유, 독점의 자유는 모두에게 공평한 자유가 아닙니다. 경쟁의 효율성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공정한 경쟁, 투명한 시장, 투명한 기업,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배구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과 저항-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은 당연한 이치 같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공정거래 제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과 언론입니다. 일상적으로 시장주의를 내세워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시장의 원리는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법으로 고용을 보장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평가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동계와 일부 선생님들입니다. 법은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법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는 경쟁에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경쟁을 거부하는 사고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의 원리가 시장경제의 원리와 같다. 자유와 다양성은 창의와 상상력을 자극하여 문화산업, 다양한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져온다. 한류문화는 민주화의 결과이다.

0. 더 넓고 큰 시장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시장

소득의 격차를 줄여주면 서민들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옛날의 기준으로는 사치스럽게 생각되던 소비도 이제는 소비시장의 활력을 위해 당연한 일로 수용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골프장에 대한 인식도 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해외소비가 늘어나면 국내소비가 위축됩니다. 국내소비의 확대를 위해 교육, 의료 등 소비가 해외로 몰리고 있는 고급 서비스 시장,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서비스 업 등도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넓은 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동북아 금융, 물류, 비즈니스 허브 전략

능동적 개방

적극적인 자본투자

개방과 농업, 농촌, 농민 대책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서비스 산업은 갈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마냥 보호를 할 수도 없거니와 보호만 해서는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대학을 가는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 일자리를 위해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의 진보세력과 개방에 대한 인식-

세계의 대세이다.

역사의 경험-문명은 개방과 교류로 발전해 왔다. 개방한 문명은 흥하기도 망하기도 했으나, 개방하지 않은 문화는 모두 소멸했다.

한국의 개방은 모두 성공했다. 반대로 외채망국론, 종속이론, 신식국독자론, 식반론, 신자유주의 파탄론 등

은 일면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맞지 않는 이론으로 판명이 났다. 80년대 진보진영과 나의 생각은 모두 오류로 판명이 난 것이다. 오류를 인정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상 더 개방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실용적인 이해관계의 판단과 협상 전략의 문제이다.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세력, 책임을 지는 세력이 될 수 없을 것.

0.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민주주의 발전-신뢰와 통합의 수준이 높은 사회

-**사회적 자본이론***사회적 자본에 관한 이론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원칙이 있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법치주의, 합리주의는 민주주의의 내용입니다.

-**통합성이 높은 사회**-

균형 잡힌 사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사회가 갈등이 적고 통합성이 높은 사회입니다.-복지의 균형과 세력 균형, 관용의 사상,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민주주의는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를 이루어내는 통합의 제도, 통합의 문화입니다. 나쁜사람, 다른사람, 미운사람을 서로 인정하고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어가는 제도이자 기술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합리주의, 민주주의와 족보를 같이한다.

0. 함께 가는 복지 사회

-함께 가는 경제-기업은 기업 생태계와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생태계와 따로 떨어져서 혼자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동반성장, 상생 협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함께 가는 복지 사회가 생산성이 높은 사회입니다.

복지는 국민의 행복입니다. 아울러 복지에 대한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므로 그 사회의 생산력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복지 투자는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그 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도 기여합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안정된 주택에서 문화와 여유를 누리는 나라

자녀교육, 질병과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는 나라
보육과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여, 건강하고 밝게
자라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고, 실업지원과 고용지원,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모두에게 능력
향상을 통한 성취의 기회가 열려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국민들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일하는 나라,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나라, 성장이 지속가능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지출은 더 이상 소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상과 같은 논리를 사회투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사회투자는 사회지출을 낭비와 의존성의 근원으로 인식하는 신자유주의 비판에 대응,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으로, 소비적인 사회복지를 넘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회의 평등과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는 개념임.

○.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는 영국 신노동당 경제·사회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엔서니 기든스가 '제3의 길'(1998)에서 처음 사용한 후 유럽에서 많이 사용됨

○. 국내에서는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과 사회복지노동시장'으로 논의('06. 11),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발간('06. 12)한 『선진복지한국의 비전과 전략』에서 김연명 교수(중앙대) 등이 주장

○ 대표적 사회투자정책은 아동·청소년 정책(아동빈곤해소, 교육기회 평등), 여성친화적 정책(일과 가정의 양립),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근로연계 복지프로그램) 등임

성장과 분배를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는 낡은 생각입니다.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입니다.

일부 야당과 언론은 성장과 복지를 별개의 가치로 전제하고, 참여정부를 분배정권, 좌파정권이라 이름 붙이고 끊임없이 비난을 퍼붓고 있음

조금만 멀리 보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없고, 끼니를 걱정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안정된 직장이 없고,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의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넘치는 나라의 경제가 경쟁력 있는 경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이치입니다.

-함께 가는 노사관계라야 안정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양극화의 해소는 함께 가는 나라의 핵심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우선하는 경제, 사회복지 투자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재정에 재분배 기여정도

○ 시장소득 Gini계수와 재분배정책 효과가 반영된 가처분소득 Gini계수를 기준으로 한국과 OECD회원국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는 복지와 재분배정책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시장소득 Gini계수는 한국 0.3111, 스웨덴, 프랑스는 각각 0.439, 0.417로 재분배정책 이전의 격차는 우리가 더 양호함.
- 이에 반해 정부의 재분배정책 효과가 반영된 가처분소득의 Gini계수는 한국은 0.3016으로 시장소득 Gini계수와 별 차이가 없으나 스웨덴, 프랑스는 각각 0.230, 0.278로 시장소득 Gini계수보다 매우 양호해짐

< 전가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 OECD 국가와 비교 >

| OECD 회원국가 | 시장소득 Gini계수(A) | 가처분소득 Gini계수(B) | A - B |
|------------|----------------|-----------------|--------|
| 스웨덴(1994) | 0.439 | 0.230 | 0.209 |
| 핀란드(1995) | 0.379 | 0.228 | 0.151 |
| 프랑스(1994) | 0.417 | 0.278 | 0.139 |
| 아일랜드(1994) | 0.461 | 0.324 | 0.137 |
| 영국(1995) | 0.428 | 0.312 | 0.116 |
| 독일(1994) | 0.395 | 0.282 | 0.113 |
| 네델란드(1995) | 0.348 | 0.255 | 0.093 |
| 캐나다(1995) | 0.374 | 0.285 | 0.089 |
| 호주(1994) | 0.391 | 0.305 | 0.086 |
| 노르웨이(1995) | 0.335 | 0.256 | 0.079 |
| 미국(1995) | 0.411 | 0.344 | 0.067 |
| 한국(2004) | 0.3111 | 0.3016 | 0.0095 |

-작은 정부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작은 정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복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가 성장의 부담이 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적합한 말일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주 적절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한국 정부는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정부라는 말은 효율적인 정부라는 뜻으로만 사용하거나, 아예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정부'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이미 변했음.

- **성장은 이제 기업 등 시장의 몫이 되었음.** 과거처럼 정부가 금융 등 국가자원을 몰아주고 시장을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음. 아마도 규제완화 정도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일 것임.
- **이제 정부의 몫은 시장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주 탈락하거나 은퇴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 주는 시대로 변화되었음**

-예산으로 본 참여정부의 복지 확충 실적-행사보고서 대통령 말씀자료에서 옮김

○ 국민의 정부에서 구축된 제도적 기반위에서 복지지출을 확대

< 기간별 재정규모 및 복지지출 증가율 비교 (연평균, %) >

| 국민의정부('97~'02) | | 참여정부('03~'06) | |
|----------------|------|---------------|---------------|
| 재정전체 | 복지분야 | 재정전체 | 복지분야('03~'05) |
| 6.3 | 8.0 | 11.3 | 19.5 |

* 분야별 통합재정규모는 결산기준(건보, 고용보험 포함)으로 작성되어 복지는 '05 통계사용

* 비서실장 발제자료의 통계와 비슷하면서도 달라서 혼동이 있습니다.

*경제수석-예산으로 본 역대정부 비교에는 다음rhki 같습니다.

< 기간별 재정규모 및 복지지출 증가율 비교 (연평균, %) >

| 국민의정부('97~'02) | | 참여정부('03~'06) | |
|----------------|------|---------------|------|
| 재정전체 | 복지분야 | 재정전체 | 복지분야 |
| 6.3 | 8.0 | 11.3 | 20.1 |

* '05년까지 결산기준. '06은 예산기준

○ 그 결과 '04년부터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개발 분야를 추월

(%)

| 구 분 | '02 | '04 | '05 | '06 | '07 |
|---------|------|------|------|------|------|
| 복지지출 비중 | 19.9 | 24.5 | 24.7 | 25.0 | 25.9 |
| 경제지출 비중 | 22.6 | 23.2 | 21.2 | 20.7 | 19.8 |

- * '02~'04년도 통합재정 결산 기준, '05~'07년도 총지출 예산 기준
- * 복지지출 규모(통합재정 결산기준, 조원) : ('02) 26 → ('05) 45
- * 총지출기준 복지지출 규모(조원) : ('06) 56 → ('07안) 61.8

* 위의 표는 행사보고서에서 복사한 것이고 아래의 표는 경제수석 보고서 일부를 옮긴 것입니다.

(%)

| 구 분 (비중) | 5공화국 ('87) | 6공화국 ('92) | 문민 정부 ('97) | 국민의 정부 ('02) | 참여정부 | | | |
|-------------|---------------|---------------|-------------------|--------------------|------|------|------|------|
| | | | | | '03 | '04 | '05 | '06 |
| ▪ 경제 | 17.7 | 18.7 | 24.5 | 22.6 | 28.7 | 23.2 | 21.0 | 18.4 |
| ▪ 복지 | 14.3 | 17.9 | 17.9 | 19.9 | 20.2 | 24.5 | 26.7 | 27.9 |
| ▪ 국방 | 25.5 | 19.3 | 13.3 | 11.6 | 11.4 | 11.4 | 10.3 | 11.5 |

* 통합재정규모 결산기준. '06년 통계는 예산기준

② 사회안전망 확충과 성장잠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

○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내실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

- 기초생활 보장대상을 전체 인구의 3% 수준으로 확대
: ('02) 135만명(3조 4,303억원) → ('06) 161만명(5조 3,438억원)

-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06.7) : 최저생계비 120 → 130%
-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도입('06)
- * 노인요양수발보험 제도 도입 : 시범사업('05~'08) 추진중

-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예산 대폭 확충
: ('02) 1조 2,521억 → ('06) 2조 5,000억원

- 특히, 여성보육관련 사회서비스 증가율은 3.8배

- * 여성보육 서비스 : ('02) 3,171억 → ('06) 1조193 억원 (연평균 33.9% 증가)
- '07~'10 기간 연 20만개씩 총 80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추진

- 고용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대폭 확충

- *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02) 4.9조 → ('06) 9.3조원(연평균 12.7% 증가)

③ 복지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03 개정안 '06년 대안 제출)
- 건강보험 재정효율화를 위한 약제관리 시스템 개선과 환자·병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의료급여제도개선 추진
- 서비스전달체계 개편('06)
: 읍면동사무소 → 주민문화복지센터 전환

0. 균형발전-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각국의 균형발전 정책, 일반적인 폐해와 서울의 구체적인 나쁜 지표들을 제시합니다.

-**수도권의 질적 발전**-서울은 동북아 첨단 비즈니스, 금융 중심의 도시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서울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 역사와 전통, 숲과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문화 도시로 가야합니다. 수도권은 비즈니스 금융과 함께 물류 첨단산업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쾌적하고 문화적인 살기좋은 첨단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계획적 관리'로 남개발과 환경파괴를 막고, 품격 있는 첨단도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행정수도-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기 좋은 국가 행정의 중심, 미래의 삶을 보여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과학 문화도시,

-경쟁력 있는 지방-

지방이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환경, 생활환경, 교육환경, 보건과 문화 환경을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전에도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공약이 있었으나 성과를 기대할 만한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역혁신과 지식역량의 축적, 공공기관의 이전과 혁신도시, 연구개발예산 균형발전재정 등 자원의 우선적 배분, 조세감면 임대공단 기업도시 등 유인책의 제공, 등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본 결과 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2단계 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도농 상생-더불어 사는 도농상생, 변화와 활력을 주는 전원생활-생활공간의 확장, 자연과 공동체의 복원, 쾌적하고 여유 있는 노후

0.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대비

-출산율을 높이자.

출산, 보육, 교육, 직장, 노후, 질병, 안전, 모든 것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이 없는 나라라야 아이를 낳는다.

결혼을 일찍 하는 문화를 만들자.

-인적 자본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보육정책, 직업교육, 평생교육, 고용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병역제도의
개선, 학제개편, 청년정책 등 5+5전략

외국인 정책-노동자 정책, 이민과 결혼자 수용 정책

-안정된 노후생활의 보장 -연금제도, 노인 일자리, 건강 의
료정책

0. 비전 2030

-세계일류국가, 선진한국의 비전과 국가발전 전략을
종합하여 전략적 체계로 재구성한 것이 비전 2030입니다.

이름은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입니다.

비전은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2030년에 GDP는 4만 9천 불로,

국가경쟁력은 29위에서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공공사회 지출 8.6%에서 21%로 끌어 올리는 것
입니다.

전략의 핵심적 수단은 '제도 혁신'과 '선제 투자'입니다.
제도 혁신은 낡고 비효율적인 제도는 뜯어고치고, 새로운 시
대에 맞는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입니다. 선제 투자는
이대로 미적거리다가는 가래로 막아야할 일을 미리 투자하여
호미로 막자는 것입니다.

그 안에 50개의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와 숫자는 융통성 있게 넣고 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장기 계획입니다.

과제만 늘어놓은 종이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정계획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는, 선진한국의 필수과제입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장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필요한 돈은 예산의 절약과 구조조정, 투명성 확대를 통한 세원의 확보, 불합리한 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장차는 부족한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국채로 조달할 것인지, 보험료로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음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채는 적절한 수준이 문제일 것입니다. 보험은 인두세적인 성격이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030 계획대로 할 경우 국민 부담률의 증가 추세, 보험료 부담률의 증가 추세와 보험금 지급의 증가추세, 일반회계의 증가소요, 국채로 충당할 경우의 국가채무 증가추세, 조세로 할 경우 조세 증가 추세 등을 수치와 그림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20년 또는 30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회피하고는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도자는 경제만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동반성장과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과 같은 새로운 전략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세계일류국가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선진 경제는 이상 더 산업화 시대가 아닙니다.

0.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세계적 경쟁에서 승패의 관건은 변화의 속도입니다. 변화의 속도는 개혁의 속도입니다. 뒤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개혁은 제 때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출산율은 84년에 이미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의 산아제한 시절에 만든 여러 제도가 최근까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저출산 문제가 다급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도 즉시 개혁이 필요한 제도혁신 과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혁은 어려워집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연금에 발목이 잡혀 있다가 지금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끝나야 공무원연금 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4대 보험 징수업무의 통합은 뒤로 미루고 싶었습니다. 한미 FTA가 부담이 되는 마당에 한꺼번에 여러 개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반대전선의 확대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갈등이 증폭되고 세상이 시끄러워지면 국민들도 피곤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혁의 속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고쳐야 할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날 독재 헌법을 직선 헌법으로 만들면서 대충 손질한 불완전한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단계 개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20년간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여야의 지도자들과 모든 언론들이 하자고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꺼내 놓으니 모두들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대통령과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한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장차라도 개헌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 없습니다.

아무 논리도 근거도 없이 그저 정략이라 안 된다고만 말합니다.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내놓은 개헌안입니다. 누가 하면 되고 누가하면 안 된다는 이런 정략적인 계산으로 논의조차 봉쇄하는 것은 공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으니 오만해 진 것입니다. 부자 몸조심하는 모양입니다. 꾸벅 꾸벅 따라만 가는 것은 국회의원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자기에게 유리 불리를 생각하기 전에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관하여 국민 앞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입니다. 이해관계를 셈하고 눈치만 보는 것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만일 제가 개헌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부 언론은 20년 만에 한번 오는 좋은 기회에 노 정권이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는 비방을 할 것입니다.

0. 참여정부는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참여정부는 로드맵 정부, 나토정부, 아마추어 정부라는 야유를 받아 왔습니다. 경제파탄, 민생파탄, 국정실패, 국정파탄, 총체적 파탄, 등 끊임없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했습니다만, 민심마저 돌아서니 위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그 동안에 참여정부가 한 일을 돌아보며 이제는 자신을 가집니다. 참여정부는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0. 참여정부는 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민에게 행복과 영광을 가져다 준 지도자는 단지 경제만 하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철학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고, 세계의 변화를 한 발 앞서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한 지도자입니다.

참여정부는 87년 체제의 역사적 과제를 정리하고, 다음 시대의 기반을 다지는 일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50년 전, 우리는 근대화의 흐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참혹한 식민지 시대를 겪었습니다. 해방이후시대, 우리

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는 민족의 통합과 자주독립 국가의 건설, 그리고 민주주의와 경제건설입니다. 경제의 건설은 일찍 시작되었으나 민주주의는 여러 차례 좌절하고 독재에 짓밟혔습니다. 독재시대의 과제는 반독재 투쟁이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6월 항쟁 이후 시대의 과제는 독재체제에서 구축된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여 부정과 부패의 유착구조를 해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지역 간의 분열구도를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의 2단계 과제이자 87년 체제의 과제라는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의 과제는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 3단계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2단계의 과제이자, 87년 체제의 역사적 과제를 국민에게 공약했습니다.

후보가 되기 전,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에서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친구 같은 대통령’ ‘상식이 통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이 떳떳한 사회’ 그리고 ‘개혁과 통합’ ‘새로운 정치’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당선 후 인수위 시절에는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국정 원리로 정하고,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구호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 저는 이 공약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그 자체가 개혁이고 새로운 정치의 출발이었습니다. 노사모의 참여운동은 돈 선거, 부정선거라는 악습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주권 시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 대선자금의 수사로 부정한 정치자금의 고리를 철저히 파헤쳐 돈 선거의 뿌리를 끊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차떼기 같은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부끄럽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참고 해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총선은 사상 유례가 없는 투명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선거 관련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을 앞지르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의 평점을 받았다.

지난해 지자체 선거에서는 공천장사라는 부정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구도와 기초단체장 공천 제도가 결합해서 경쟁 없는 선거를 낳고, 경쟁 없는 선거가 공천 장사를 낳은 것입니다. 철저한 단속도 필요한 일이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한 일입니다.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 놓았습니다. 정권에 봉사하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원은 본연의 국가안보와 산업기술의 보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상 더 국정원의 정치사찰, 뒷조사, 도청은 없을 것입니다. 국세청이 나서서 정치자금을 거두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 군, 경찰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량한 국민들이 권력기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권력도 줄였습니다. 당의 인사나 공천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더 당도 국회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대권은 없습니다.

이제 정경유착은 해체된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 달라 안하고, 청탁도 없어서 속이 편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탈법과 특혜도 줄어들겠지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국민의 정부에서 이미 해소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곤하니 그만 두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군사독재가 무너진 이후에는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여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보도에 책임을 지는 언론이 될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정치를 지배하려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민의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의 언론이 아니라 시민의 언론이 될 때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수준이 있는 언론이 되도록 견제의 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가판 중단, 기자실 개방, 브리핑제 도입, 정책기사 점검 시스템,

국경 없는 기자회-2006세계언론자유지수 168개국중 31위, 아시아 1위, 일본은 51위, 미국은 53위

그러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부 언론을 한 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보고들은 것과는 사뭇 다른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생방송으로 보신 내용이라서 많이는 왜곡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내일 일부 신문을 보면, 오늘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고 자료로 배포한 내용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을 것인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부분은 신년연설 원고에 들어 있던 것

언론의 역할은 정치의 경기장에서 스스로 뛰는 선수가 아니라 해설가입니다. 그 언론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경기를 가로 막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은 경기장을 떠나야 합니다. 해설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훗날 대통령은 언론에 굴복하지 않은 것, 공무원이 언론에게 당당하게 잘못된 보도와 의견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든 것, 등을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밀실, 측근, 가신, 이런 말로 상징되는 비선권력에 의한 비공식적인 권력행사와 그로인한 부정부패도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무슨 사건이 나고 비자금이 나올 때마다 정관계 로비라는 말이 나오고 청와대 누구, 대통령 측근 누구라는 말이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마다 저는 설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생각하며, 가슴을 조였습니다. 다행이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선언 문, 철도공사 유전, 행담도, 바다이야기, 등에 관한 사례를 열거하자.
-자료요청 하였음. 론스타도 해당?

지난번 1조 6천억 원 규모의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도입할 때 또 무슨 잡음이 있을까 지켜보았으나 아무 시비도 없었습니다. 그 밖에 정부 조달이나 입찰 등에도 권력형 부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이트라는 말도 이제 사라지는 것 같고, 특검 하자는 말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특검을 들고 나오고 있지요. 헌법 논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도 투명하게 제도화 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나 한두 사람의 측근이 인사를 농단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른바 밀실인사, 비선인사도 없습니다.

아직도 정무직 인사에 대한 정치적 시비는 많지만 *지난날 잡음이 많았던 장군인사 등 고위공직자의 인사에 뒷말이 없다.

권력사회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투명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02년 상위 39퍼센트 수준에서 2005년 상위 25퍼센트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해마다 분모가 달라지므로 순위를 가지고는 정확한 추세를 알 수가 없어서 백분율로 환산함.

국제경영개발원-뇌물 부패항목-04년 42위에서 05년 33위로-* 그 이전의 통계는 없는가?

국가청렴위원회-공공기관 청렴도 03년 7.71에서 06년 8.77로 상승. 공공기관의 금품향응 제공률 03년3.5에서 06년 0.7로 상승-*어제 단위가 이상하다.

법치의 문화와 준법의 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독재시대에 생겨나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까지 했던 **정치인의 장외투쟁**은 이제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87년 이후 우리사회의 문화가 되었던 **이익집단의 길거리 정치투쟁**도 이제 점차 온건해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정통성이 바로서고, 정치권력 스스로 법치질서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2단계 민주주의는 87년 체제의 역사적인 과제였습니다. 이 과제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히 진전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그 성과를 물려받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87년 6월 항쟁 2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에 이 역사적인 과제의 마무리를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척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진보는 단지 정치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문화 발전의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공통성, 자유와 다양성이 창의를 원천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 자본.

근래에 와서 **사회적 자본**은 기업과 국가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이 사회적 자본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OECD평균이 되면 성장률을 1퍼센트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본 일이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그대로 믿는다면, 참여정부는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국민통합, 특히 지역주의의 청산은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계승과 극복**의 관계입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극복의 과제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87년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4당 체제 이전의 여 야 정당구도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아직 영남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진보도 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기록한 **영남권 득표율 32%**는 16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얻은 13%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요즈음은 인사에서 지역 문제가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가 다 해먹는다는 말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열린 우리당 사람들의 탈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 들어보아도 그들이 말하는 명분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와 통합을 하자는 것인지, 통합을 한다면 왜 사전에 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것인지, 왜 당을 쪼개야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당은 이념과 노선, 정책으로 뭉친 결사체입니다. 정치가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실현하자면 정권을 잡아야하고 정권을 잡자면 많은 사람이 당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이 연이어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지지도가 낮아서 다음 대선의 전망이 밝지 않고 대선에 이은 총선에서도 고전이 예상되니 의원들이 동요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당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집안싸움이나 일삼다가 마침내 당을 쪼갰다고 당이 살아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대통령 때문에 당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면 다소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 지도부가 무능력하여 당이 어려움에 빠졌다면 전당대회를 통하여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면 될 것입니다. 당원들 간의 문제라면 서로가 노력하여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이나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당을 쪼개거나 탈당을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다 그렇게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 일부 사람들은 당을 해산하자고 하다가 안 되니 다시 당을 쪼개려고 시도하고, 그도 시원치 않으니 탈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모두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정치에서 명분이 없는 일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해도 탈당의 이유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상상력으로는 지역주의의 원심력, 그 이상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3단계의 과제입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과 타협이 일상화되고, 연정, 연합정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이런 인식을 가지고 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저 스스로의 체질과** 이미지가 화합형이 아니었던 같고, **객관적인 정치상황** 또한 독재와 공작정치 시대에서 형성된 불신과 대결의 문화가 불식되지 않고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정,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안팎에서 타박만 당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안한 것은 공작정치에 의한 변절과 야합만을 보아왔던 우리 사회에 연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개념을 자연스럽게 수용되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대화의 정치가 성공하기 어려웠던 객관적인 정치상황, 특히 한나라당의 행태-대선 불인정, 대통령에 대한 불신-모든 것을 공작으로만 보는 시각, 대통령에 대한 모욕-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모욕적인 언사, 등에 관한 자료를 모아봅시다.

어떻든 이 과제는 다음 시대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다음지도자 상을 생각해 봅니다.

0. 참여정부는 할 일을 책임있게 했습니다.

이전 정부들이 넘겨준 밀린 과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오늘 처리할 일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
다. 책임 있게 국정을 처리했습니다.

-참여정부는 넘겨받은 위기를 무난히 관리했습니다.

출범 당시 북핵위기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신용 불량자는 284만 명으
로 정상수준을 훨씬 넘어선 상태에서, 어떤 달엔 20만 명씩 늘어나고 있었고, 소
비는 이미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외조달 자금의 가산금리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으로 치솟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해외차입이 사실상 중단 직전까
지 몰렸습니다. 여기에 SK글로벌 사건이 터졌고 90조원에 이르는 카드채가 부
도위기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6월에는 음식업, 숙박업에 대한 과잉대출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은행들을 강제할 수단도, 더 투입할 공적자금도 없는 상태
에서 이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결국 신용 불량자는 2004년 4월, 382만 명을 고비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05년말 294만명, 2006년 말 283만 명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소비도 그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아직도 민생의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위기는 넘어섰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기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율문제, 부동산 대출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
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금융, 물가까
지 조기경보시스템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아무런 부담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튼튼한 경제를 물려줄 것입니다.

-경제성적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2002년 1,600억 달러였던 수출이 지난해에는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4년 경상수지 흑자 합계가 6백억 달러를 넘습니다. 외환보유액도 1,2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4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600선에서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3.6%에서 3% 수준으로 안정돼 있고, 실업률도 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로 무너졌던 현대건설, 하이닉스, LG카드, 대우건설 등 부실기업도 정상화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입원유 가격은 배럴당 24달러에서 60달러 선으로 2.5배 가까이 급등했고, 환율은 달러당 1,200원 선에서 평균 940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악조건을 딛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이런 성과입니다. 야당과 언론들이 끊임 없이 우리 경제를 위기니 파탄이니 하면서 저주하는 가운데 이런 성과입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경제를 두고 '경제파탄'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를 빗대어 '차라리 무능한 정부보다 부패한 정권이 낫다'는 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 대한 인식은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2003년 GDP 성장률은 3.1%입니다. 그 이후는 4.7, 4.0, 5.0이고, 4년간 평균은 4.2%입니다. 평균 4.2% 성장은 선진국 클럽인 OECD 30개 회원국 중 7위 정도의 성적입니다. 지난해 성장률 5%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이제 한국경제도 곧 2만 달러 시대로 들어갑니다. 선진 7개국인 G7이 우리와 비슷한 국민소득 수준에서 기록한 성장률은 3.2% 정도입니다. 한국은 이상 더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성장률을 가지고 한국 경제를 파탄이라고 말한다면 한국경제는 영영 파탄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는 30년 전부터 추진되던 것입니다. 균형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과제입니다. 완성되면, 첨단 도시, 미래도시의 모델, 세계적인 명물이 될 것.

공공기관 이전도 오랫동안 말로만 거론되던 것입니다.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기관의 이전 수준을 넘어 10개의 혁신도시 건설, 한국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용산 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공약만 하고 미루어 온 것입니다. 민족 역사공원은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원과 지하의 도시 문화시설이 입체적인 조화를 이룬 시민의 휴식처이자 세계적인 명물로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5조 5천 억이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놓고 고심했으나, 땅을 산다는 각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방개혁도 20년 전부터 거론되고, 이후 시도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법을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군 스스로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의 이관도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하던 것입니다. 물론 언론들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던 일입니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년간 끌어오면서 여러 차례 홍역을 치르고 좌절되었던 과제였습니다.

100년을 넘게 끌어온 항만노무 공급체계도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적자문제, 항공우주 산업의 재무구조 문제도 개선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끄집어내어 알뜰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20-30년 밀려온 과제를 다 정리했습니다.

연금개혁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발리 묶여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이 매듭이 되어야 공무원연금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사법개혁은 문민정부에서부터 시도한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3년간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사법개혁 추진위원들의 노력으로 관련 이해집단 대표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법조 교육 선진화,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루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학법을 가지고 발목을 잡을 일이 아닙니다.

연금개혁과 사법개혁은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잘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처리할 일을 제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운동일 것입니다.

디지털 방송방식에 관한 싸움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방통융합의 문제는 좀 늦었습니다. 방송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하루라도 속히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권이 문제라면, 그 부분은 국회에서 시행시기를 다음 정권부터 적용하도록 해도 좋을 것입니다. 방통융합 자체는 하루 속히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미 FTA, 4대보험 정수통합, 다 갈등이 많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입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혁신도 잘 가고 있습니다. 정부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밀려왔던 수많은 개혁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그 동안 사건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것을 참여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체계와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마침 사법부가 **인혁당 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신 독재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해 사건을 조작하고 사형선고가 내려진 뒤 불과 18시간 만에 형을 집행한 사건입니다. -재심이 과거사조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과거 국가권력이 인권을 유린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고통받아온 분들의 맺힌 한을 풀고, 국가 권력의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의 발의도 오늘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 자세에서 참여정부가 할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략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한꺼번에 여러 개혁과제를 추진하면, 갈등의 전선이 늘어나고 저항이 많아져서 정부의 지지를 관리하기 어려우니 속도를 좀 줄이는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저는 우리의 제도와 문화의 전반적인 수준이 선진국에 도달하려면 어정거릴 여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나라가 시끄러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끄러운 것은 야당과 언론의 시비와 대통령의 반론이 시끄러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을 욕심내지 않았다면 좀 덜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 잘 못했다 싶은 일이 있습니다. 선거의 와중에 사패산, 천성산 터널공사를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농성과 시위가 있었을 때, 선거가 끝나면 대회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 공사들을 유보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것은 잘 못된 판단이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된 가운데 홍역을 치렀다.

0. 참여정부는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2.0이 된 84년 이후 최근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결과가 오늘날 다급해진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입니다.

94년 WTO에 가입할 당시 우리는 아무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 미래의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97년 경제위기도 시장 혁신, 경제제도 혁신을 미루어 온 결과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일찍부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훗날 문제가 되거나 부담을 남길만한 문제를 미리 꺼내어 과제로 설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혁신 주도형 정책,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미래 성장 동력산업, FTA, 동반성장, 균형발전, 정부혁신, 모두가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미래과제는 정부혁신과 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 대책입니다.

전체를 모아서 종합적인 체계로 정리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2만 달러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 '비전 2030'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구상만 하고 실행을 할 수 없었던 미래과제도 있습니다. 북방 투자, 북방 경제입니다. 동북아 시대의 비전의 본질적으로 동북아 평화구조라는 안보적 비전입니다만, 동북아 허브 전략, 북방경제 전략이라는 경제적 비전이 들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히 북방경제는 베트남 특수, 중동특수 이상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 되면, 2-30년 이상을 갈 거대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핵문제 때문에 한발 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은 동안에도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지원을 확대한 것은 이런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득이 다음 대통령에게 이 일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북핵 문제라도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으로 행정수도,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착공이 되고, 용산기지 이전으로 평택 기지와 용산공원이 착공되면, 건설경기가 좋아 질 것입니다. 여기에 호남고속철도도 있지요. 참여정부에서 결정해 놓은 것만 해도 건설경기와 경제성장에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운하공사 등의 토목공사를 더 벌이면, 자재 인력난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 바랍니다. -지시하였음.

0. 참여정부는 이전의 어떤 강력한 정부보다 많은 일을 해결했습니다.

‘너무 힘이 없다. 강력하게 좀 하라’는 주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출발 첫째 여당의 의석이 4분의 1이 안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대의 국회는 1년이 채 못 되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여론도 하는 일마다 역풍이었습니다. 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국회에 걸려 있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과제는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법치질서가 어느 때보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공권력도 어느 때보다 원칙대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잡아넣지도 않았고, 고문하고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을 원칙대로 집행했을 뿐입니다. 원칙의 힘입니다. 그리고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가 되기 이전 이미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력한 정부’를 말한 바 있습니다.

0. 아직 완료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방통융합, FTA, 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 등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치경찰은 국회에 걸려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지역구도 극복과 국민통합-현재 진행형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헌법 개정

북핵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0. 국정에 전념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올인 하라는 말도 듣습니다. 국정에 전념해 왔고 전념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념하라는 상투적인 공격은 불성실한 정치공세입니다.

승패의 관건은 변화의 속도입니다. 열쇠는 개혁의 속도, 국정수행의 속도입니다. 국회도 좀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더욱이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남 보고 전념하라 하기 전에 발목부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와서는 갑자기 뭐 하지 말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헌법 개정 발의, 또 뭐가 있지요?

0.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용으로 대통령에게 터무니 없는 공격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공격을 하면, 자연히 해명을 하게 되고, 정치싸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